

실직기간 구직활동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상 록*

본 연구에서는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 해소에 보다 적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업대책 혹은 기존 실업대책들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실직기간 동안에의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양상 및 이의 재취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9년 5월 실직 등록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직기간 동안 전개된 구직활동 양상에서 실직지속자와 재취업자간에 구직 노력 및 구직방법 활용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구직활동의 효과성과 구직태도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구직활동이 미친 영향을 Logistic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구직활동은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구직활동의 효과성, 구직태도, 구직방법의 적극적 활용 등은 재취업 결정에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재취업 결정에서 구직활동의 영향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관점과 접근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적 함의를 지닐 뿐 아니라, 실업대책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취

*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전임강사

업 결정에의 이와 같은 구직활동의 영향들이 관련 실업대책들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정책적 합의로 제기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라 판단된다.

1. 서론: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개된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구조조정 조치는 한국사회에 200여만 명에 이르는 실직자들을 일시에 양산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3년 여의 시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최근의 실업률은 4%까지 감소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량실업사태의 부정적 여파가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실업률 동향에 토대하여 “IMF 위기의 종언” 혹은 “실업문제의 종언” 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업사태의 종결을 낙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내 실업률 통계들에서 실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극히 협소하여 체감 실업률과는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실망 실직자들의 증대 추세가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한 최근의 실업률 감소 추세가 임시직, 일용직 및 계약직 등의 불안정 고용의 증대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실업률 감소 추세를 단순히 ‘고실업 구조의 해소’ 혹은 ‘노동시장의 안정’으로 낙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앞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던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고실업 현상이 1970년대 말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뚜렷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경력이 3년 여에 불과한 한국사회의 현 시점에서 실업문제 해소에 대한 공언은 극히 시기상조일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한국경제 전반에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노동시장 퇴장과 불안정한 취업으로 잠재적 실업자 규모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구조조정 이후 경제성장에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경기안정과 구조조정 이후에도 야기될 수 있는 고실업 사태의 재연 및 지속에 대응되는 효과적인 대응전략

의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그간의 정부 실업대책들이 대량실업사태라는 위기상황에의 응급책으로 추진되어, “실업대책의 실험장”이라 불릴 만큼 각종 정책적 방안들로 난무하였음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실업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입각한 효과적인 실업대책의 모색과 기존 실업대책들의 성과와 한계에 토대한 실업대책들의 구조적 재정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실직기간 동안의 실직자들의 구직활동과 재취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규명을 통해, 실업대책들의 효과성 제고에의 이론적 기반을 조성함에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가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구직활동을 토대로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보공유가 불완전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은 일련의 구직활동과정(*job searchig process*)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동시장에서의 재취업 결정은 시장기체에 의거하여 실직자들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이 자동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력 수요자 및 공급자들의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인해 관련 정보들을 수집, 선별, 선택, 결정하는 일련의 구직활동들이 취업결정에의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 의거하면,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에 대한 관련 기존 연구들은 노동력 수요(노동시장 구조와 상황)와 노동력 공급(실직자들의 개인 특성)의 측면들의 영향만을 분석하였을 뿐, *job-matching* 과정인 구직활동이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의 관련 요인들을 온전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재취업 결정에 관한 일련의 기존 연구들(김종주, 1999; 강철희 외, 1999; 유태균, 1999, 진재문, 2000)은 ‘실직상태로의 유입’(*inflow*)과 ‘실직가구의 실태’를 중심적인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던 초기 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실직탈출, 즉 실직상태로부터의 유출’(*outflow*)을 중심적인 연구주제로 설정하여 연구영역의 확대와 효과적인 실업대책 모색이라는 정책적 흐름에 부합하는 진일보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을 ‘실직으로부터 재취업에 이르는 동태적 과정’(*dynamic process*)에 토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단순히 일자리 특성과 실직자 특성이 기계적으

로 결합되는 상황적 사건'(situational event)으로만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상 주요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간의 기존 연구들은 실직자 개인특성 혹은 관련 실업대책의 재취업에의 영향을 규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취업 결정 양상 및 실업대책의 효과에 대한 온전한 분석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실직기간 동안에의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재취업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혹은 이를 토대로 실업대책들의 효과를 제고함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방하남 외, 2000), 이들 연구들은 구직활동 양상에 대한 단편적 기술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도 이에 관한 연구성과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실직기간에의 구직활동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의 영향 요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실업대책의 효과성 제고에 일조하고자 한다. 요컨대, 구직활동의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재취업에 관련되는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양상을 토대로 실업대책의 모색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제고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더 나아가 실업대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의 주요한 정책적 함의들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¹⁾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구직활동과 재취업의 관련성 규명이 지니는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여, “실직기간 동안에의 구직활동이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직활동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실직자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직활동 요소들을 정리한다. 다음 3절 연구방법에서는 분석 데이터와 분석 모델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을 소개한다.

1) 일례로, 재취업 결정에 관련된 주요 구직활동 요소들에의 규명은 실직자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사업의 재취업 효과 제고에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대책 재정지출에의 효율성 제고가 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4절 분석결과에서는 먼저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실직자(실직지속자)와 재취업자의 구직활동 양상을 비교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실직자의 재취업에 구직활동이 미친 영향과 주요 구직활동 요소들을 검토한다. 마지막 5절 결론에서는 주요한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 및 실업 대책 개선에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 선행 연구들의 검토

1) 구직활동과 실직자의 재취업

‘구직과정’ (*job searching process*), 즉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측면에서 실직자들의 실직과 재취업을 파악하려는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은 실업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이 지닌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된 이론적 관점으로, 실직기간 실직자들의 행태 규명에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실직상태의 지속 및 재취업 결정의 양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이론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직업탐색이론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유의 불완전성이라는 문제가 각인된 노동시장에서의 *job-matching*은 수요 - 공급이라는 시장원리가 완벽하게 작동되어 이루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job-matching* 과정에 관련된 노동력의 공급자와 수요자에게는 관련 정보의 수집, 선택, 결정과정이 요청되고, 이러한 구직(구인)과정들은 *job-matching* 결정에의 토대가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Balch & Fayissa, 1990; Fitzgerald, 1998).

이와 같은 직업탐색이론이 지닌 이론적 함의는 무엇보다도 기존 이론적 관점들이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일 측면만을 토대로 실업 양상에 접근하였음에 반해, ‘수요 - 공급의 조절과정’ 즉 ‘*job-matching* 과정’을 토대로 실업의 발생 및 지속, 탈출에의 역동성을 이해함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기에, 직업탐색이론에서는 구직과정에서의 실직자들의 구직활동과 구직태도는 실업상태의 지속 혹은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된다(Blau & Robins, 1990; Taris

et al., 1996). 즉, 직업탐색이론에서는 “실직자들은 구직과정에서 재취업에의 조건(유보임금 등) 및 구직활동의 제반 요소들(구직활동 방법 및 투여시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선택은 종국적으로는 재취업과 실직상태의 지속이라는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로 귀결” 되는 것으로 바라본다(Jones, 1989a).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직업탐색이론은 실업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요소들(경기상황, 노동시장구조, 임금결정체계 등)과 관련하여 이해하려 하였던 기존 이론적 관점들이 지닌 구조주의적 접근을 탈피하여, “실직기간 동안에의 실직자들의 경제적 선택 및 경제적 활동과의 관련성 하에서” 실업문제를 진단·분석하려는 행태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으며(Gorter & Gorter, 1993),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직업탐색이론은 ‘미시적 차원의 실업이론’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직업탐색이론이 일정 실직기간 경과 이후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지위의 차이(실직의 지속과 재취업)를 이해함에 유용한 이론적 자원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경기순환과 기술변동 등에 의해 야기된 실업 양상에의 분석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관점상 주요한 한계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같은 한계는 곧 “직업탐색이론에 토대한 실업 양상에의 규명 및 이에 입각하여 제기된 실업대책들”이 이론적 전제와 관련없이 온전한 것으로 수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기도 하다.

그러나 상이한 원인에 입각한 다양한 실업 양상이라 할지라도 “실직상태로의 유입(실직발생)으로부터 실직상태로부터 유출(재취업)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일련의 구직활동과정’이 설정되고, 이와 같은 구직활동과정은 여타 요인들과 더불어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직업탐색이론은 재취업 결정을 총체적 이해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한편, 직업탐색이론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이론 모델의 검증에 집중되어 있고, 모델 검증조차도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만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재취업 결정에의 여타 구직활동 요소들의 영향에 대한 규명은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Gorter & Gorter, 1993). 요컨대, 관련 경험적 연구들의 대부분은 유보임금의 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직업탐색이론의 이론 모델 검증에만 집중되어 있고, 일부 구직활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조차 ‘구직활동(구직지원횟수, 구직시간)의 합리적 선택모델’의 검증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직기간 동안에 전개된 다양한 구직활동들이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과 실제적으

로 어떠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성과들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 동향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는 조사 데이터의 여러 가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직기간의 구직활동과 실직자의 재취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탐색이론의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이론적 의의가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업대책들의 효과성 제고에 주요하게 관련될 수 있는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요소들을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실업대책의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기대되기도 한다.

2) 선행연구들의 검토

(1) 구직활동의 구성요소

직업탐색이론에 토대한 관련 연구들에서는 흔히 “실직자들은 구직과정에 직면하게 되며”, “구직과정에서 실직자들은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은 곧 이후의 노동시장 지위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이론적 가정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직과정’(*job searching process*)과 ‘구직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구직활동 요소’에 대한 인식은 관련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하다. 일례로 Alston 등(1994)의 일부 연구자들은 구직과정을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Jones(1989a) 및 Taris 등(1996)과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구직과정을 “정보수집뿐 아니라 재취업과 관련된 제반활동 및 태도 등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한다.

구직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구직활동 요소 역시 이와 같은 구직과정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을 토대로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물론, 직업탐색이론에서의 관련 연구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이론모델의 개발과 검증에 주목하고 있기에, 실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주요 구직활동 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부재한 실정이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구직활동 요소들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Dolton & O’Neil(1995)은 실직자의 재취업은 ‘구직제안’(*job offer*)과 ‘구직

제안의 수용'(acceptance of job offer)의 함수관계에 입각하여 결정되며, '구직방법, 구직활동의 강도, 구직노력, 구직노력의 효과성' 등은 '구직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반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등의 구직태도'는 '구직제안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구직태도 역시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Jones(1989) 역시 Dolton & O'Neil과 유사하게 재취업 관련 구직활동 요소들을 규정하는데, 그는 구직과정에서의 '유보임금, 구직활동 강도, 구직방법 등에의 선택'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Gregg & Wadsworth(1996) 역시 구직과정을 "일자리에 대한 정보수집, 지원결정, 인터뷰 참석, 구직제안의 수용" 등의 요소들로 구성된 것으로 지적하여, 앞서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구직태도' 역시 재취업 결정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Blau와 Robins(1990)는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활동 요소에 구직태도를 포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모델에 설정된 구직활동 요소들은 "접촉 기업체 수, 구직제안 건수, 수용한 구직제안 건수"로 제한되어, 앞서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구직태도를 배제한 채 특정 유형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직활동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구직과정을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Alison 등(1994)도 재취업 결정에 관련된 구직활동 요소들을 "구직정보의 출처(sources used), 정보수집활동에의 강도(search intensity), 구직정보의 내용(nature of information)"등으로 규정하여, 실직자의 구직활동들을 특정 유형의 활동들(searching activities)로만 국한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의 기존 연구들의 논의들은, 실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주요 구직활동 요소들이 구직과정에 대한 정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구직활동 요소들에 대한 연구자들마다의 상이한 규정에는 또한 분석과정의 차이, 즉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차이 역시 일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구직과정에서의 실직자들의 어떠한 구직활동 요소들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는 '주요 구직활동 요소들'이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이상에서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의거하여 본다면 이에 관한 명백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기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실

직자의 재취업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구직활동의 요소들을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요소들로는 '구직노력, 구직노력의 효과성, 구직방법, 구직태도(유보임금)'로 상정하여, 실직자들의 구직활동과 재취업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구직활동의 실직자 재취업에의 영향

직업탐색이론에서는 구직활동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요하게 가정되고 있긴 하지만, 구직활동 요소들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성과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실직자 재취업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직과정에서의 '구직활동에 대한 노력'(job search effort or job search intensity)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분석결과들을 살펴보면, Gorter & Kalb(1998)의 연구에서는 구직노력을 '구직지원 건수'(job application number)로 측정하여 구직제의를(job offer) 및 재취업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높은 구직지원 건수는 높은 구직제의를 및 재취업률로 귀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의 분석결과에서는 역으로 실직기간 경과에 따른 구직지원 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재취업률의 감소추세가 나타나, 실직기간에 실직자들이 경주한 구직노력이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 노력의 중요성은 Keely & Robins(198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구직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구직지원 건수가 많을수록, 또한 기업체들과의 고용 관련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실직자의 재취업률은 높아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구직노력을 '구직활동에 투여한 시간'으로 측정하여, 구직제의 건수 및 취업 인터뷰 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Jones(1989)의 연구결과는, Gorter & Kalb(1998)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즉, 그의 분석결과에서는 '구직활동에 투여한 시간'과 '구직제의 건수', '인터뷰 수'의 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구직노력의 증대가 곧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여 준다. 이는 곧 '구직노력의 총량'보다는 적합한 구직방법에의 구직노력의 투여, 즉 '효과적인 구직노력'이 재취업률 증대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구직과정에서의 '구직방법(job searching methods)의 활용 양상'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들을 통해 살펴보면, Balch & Faissa(1990)는 총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직방법의 활용과 실업률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연구결과에서, 구직방법들의 활용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밝혀, 구직방법의 적극적 활용이 재취업률 제고에 긍정적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한편, Alison 등(1994)은 구직방법을 '공식적 관계망'과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해 구직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의 구직방법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비공식적 관계망에 입각한 구직방법의 활용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대체로 검증되고 있음을 지적하여(Granovetter, 1974; Holzer, 1988; Rosenfeld, 1975; Allen & Keaveny, 1980), 구직방법의 활용, 특히 구직방법의 선택이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Gregg & Wadworth(1995)는 구직과정에서 활용하는 구직방법을 5개 유형(개별 기업에의 직접적 접촉, 공공취업알선센터, 민간취업알선센터, 친인척을 통한 방법, 매스컴 등의 광고)으로 구분하여, 개별 구직방법의 선택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서는 구직방법의 활용에 따라 재취업률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구직방법의 선택이 재취업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선택 활용된 구직방법들의 수가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 다양한 구직방법들의 적극적 활용 역시 실직자 재취업률의 제고에 긍정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Bortonick & Ports(1992)도 CPS 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 유형의 구직방법들의 활용에 따른 재취업 양상을 산출·분석한 연구결과에서, 구직방법들의 재취업 효과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이들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체로의 직접적 접촉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직방법이지만, 재취업 효과가 가장 높은 구직방법은 민간취업알선센터를 활용한 것이고, 반면 재취업 효과가 가장 낮은 구직방법은 공공취업알선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구직방법 선택의 영향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Gregg & Wadsworth(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구직방법들의 수는 재취업률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Gregg & Wadsworth의 분석결과와 상반되게 다양한 구직방법들의 적극적 활용은 재취업 결정에 유효하게 작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어, 상이한 분석결과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구직과정에서 실직자들의 구직태도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심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구직능력에 대한 자신감’(Kanfer & Hulin, 1985; Caplan et al., 1989), 또는 ‘구직의지’(Rowley & Feather, 1987; Gowan & Gatewood, 1992), ‘실직상태에 대한 태도’(Feather & O'Brien, 1987), ‘직업의식’(Schmit et al., 1993) 등 구직과정에서의 실직자들이 보유한 심리적 측면들이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이 경험적 분석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편,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구직태도의 영향을, ‘재취업에 기대하는 임금수준’ 즉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재취업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실직기간(Barnes, 1975; Lancaster, 1985; Jones, 1989b) 혹은 재취업 가능성(Dolton & O'Neil, 1995) 결정에 유보임금 수준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들의 분석결과들은 곧 구직과정에서의 실직자들의 구직태도 역시 일련의 구직활동들과 더불어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됨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구직과정에서의 구직활동과 구직태도가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제기하여 주며³⁾, 이는 곧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은 단순히 실직자들의 개인적 특성 혹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실업대책 등의 측면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하여 준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실직자들의 구직활동과 구직태도는 재취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후에서는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직활동과 구직태도의 재취업 결정에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물론 많은 연구들에서 유보임금은 실직자들의 실직기간 및 재취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긴 하지만, Gorter & Gorter(1993) 등의 일부 연구들에서는 유보임금의 영향이 부정되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실직기간 및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구직활동의 유효한 영향이 검증되고 있으나, Taris et al. (1996) 등의 연구에서는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 요소들의 유의미한 영향이 부정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구직활동의 영향이 명료하게 검증된 것임을 아님을 제기하여 준다. 이는 곧 더 많은 경험적 연구성과들을 통해 구직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증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3. 분석 방법

1) 자료

구직활동이 실직자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다. 조사대상자 표본은 1999년 5월 시점에서 실직상태에 있는, 그리고 고용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직자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자 표집은 재정적, 지역적,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서울과 전북 지역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직자들로 한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에 협조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서울지역 11개 기관(인력은행 1개소, 지방노동사무소 2개소, 고용안정센터 8개소), 전북지역 9개 기관(인력은행 2개소, 지방노동사무소 2개소, 고용안정센터 5개소)이었으며, 표본구성에서의 지역별, 기관별 편포의 문제 해소를 위해, 기관당 표본수를 최대 50명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북지역의 경우는 인력은행 25명, 지방노동사무소 60명, 고용안정센터 192명으로 총 282명, 서울지역의 경우는 인력은행 50명, 지방노동사무소 85명, 고용안정센터 347명으로 총 482명, 총 764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은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1999년 10월 4일 설문지를 발송하여 동년 10월 31까지 응답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8부이었지만,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113부가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조사에서의 설문 응답률은 20% 미만으로 저조한 편인데, 이는 실직에 대한 스티그마로 인해 조사 대상자들의 설문 응답을 기피하는 성향이 높은 데서, 또한 거주지 변동이 잦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변수구성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구직등록 이후 5개월이 경과된 1999년 10월 조사시점에서의 재취업 상태로 조작적 정의되어, 실직지속(0)과 재취업(1)의 이분변수로 구성, 측정하

였다.

독립변수인 실직기간 구직활동 변수들은 앞서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구직노력, 구직노력의 효과성, 활용 구직방법, 구직태도’들로 구성하였다. 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에의 투자노력 정도를 보여주는 ‘구직노력’은 ‘구직등록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구직지원 건수’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구직노력의 효과성’은 구직활동에의 투자노력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 역시 실직자의 재취업과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설정된 독립변수로, ‘구직지원에 대해 고용제의를 받은 건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직방법’은 ‘친척이나 친구를 통한 구직방법’, ‘광고나 PC를 활용한 구직방법’, ‘민간취업알선센터를 활용하는 구직방법’,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활용하는 구직방법’, ‘기업체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구직방법’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하게 활용하는 구직방법에 따라 재취업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 활용 구직방법뿐 아니라 전체 구직방법들의 적극적인 활용도 역시 실직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구직방법들의 활용도’(5점 척도)를 측정·총합하여, 관련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들과 함께, 실직자의 재취업에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구직과정에서 실직자들이 보유한 ‘구직태도’ 역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직태도를 ‘재취업에의 기대임금수준’ 즉 ‘유보임금수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구직태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실직자들의 재취업에는 실직자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기술자격 보유 등)과 가족 특성(혼인상태, 경제적 수준 등), 실직 이전의 취업경력(근로형태, 직업적 지위), 그리고 실직기간, 실업급여수준, 이전 실직경험 등의 실직특성 등도 주요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변수들을 분석모델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들을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구직활동 양상, 특히 실직자와 재취업자간 구직활동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T-tes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중심 연구문제인 실직자 재취업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직자 재취업을 종속변수로 구직활동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logistic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 변수 구성 및 측정

변수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 재취업 여부 (조사시점에서의 실직/재취업 상태)
독립변수	▶ 실직기간 동안에의 구직활동과 구직태도 ○ 구직노력 (구직지원 건수) ○ 구직노력의 효과성 (고용체의 건수) ○ 주 활용 구직방법 ○ 구직방법들의 활용도 (5점 척도에 의한 개별 구직방법 활용도의 총합) ○ 구직태도 (유보임금수준)
통제변수	▶ 개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기술자격증 보유) ▶ 가족 특성 (혼인상태, 경제적 수준 - 실직기간 월 평균 가구소득) ▶ 실직 이전 취업경력 (고용형태, 직업적 지위) ▶ 실직 특성 (실직기간, 실업급여액, 이전 실직 경험)

4.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표 2〉 참조)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실직자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성 59%, 여성 4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분포는 최저 연령 19세, 최고 연령 61세, 평균 연령은 35.6세로 확인되었다. 교육연수는 평균 13.1년으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학력은 고졸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자격증의 보유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실직자의 31% 정도는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가구상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혼인상태 구성은 기혼 57.5%, 미혼 42.5%로 상대적으로 기혼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직기간 동안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114.3만 원으로 분석되어, 본인의 실직에도 불구하고 여타 소득원을 통해 실직 이후에도 가구 생계는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취업상태	.3982	.4917	0.0	1.0
독립 변수	구직노력(구직지원 건수)	7.17	10.53	0.0	60.0
	구직노력 효과성(고용제의건수)	.9292	1.6020	0.0	10.0
	주요 구직방법(친지 등 기준)				
	매스컴 및 PC	.5841	.4951	0.0	1.0
	민간직업안정기관	8.85E-03	9.40E-02	0.0	1.0
	공공직업안정기관	8.85E-02	.2853	0.0	1.0
	직접적인 접촉 기타	2.65E-02 8.85E-03	.1615 9.40E-02	0.0 0.0	1.0 1.0
	구직방법들의 활용도	9.04	1.5445	5.0	13.0
	구직태도(유보임금)	103.84	38.69	50.0	200.0
개인 특성	성별	.5929	.4935	0.0	1.0
	연령	35.6283	11.3760	19.0	61.0
	교육연수	13.1062	2.6028	3.0	18.0
	기술자격증 보유	.3097	.4644	0.0	1.0
가족 특성	혼인상태	.5752	.4965	0.0	1.0
	실직기간 월 평균 소득	114.3922	101.5516	0.0	500.0
실직 전 취업 경력	고용형태(상용직 기준)				
	임시직	.1905	.3946	0.0	1.0
	일용직	2.857E-02	.1674	0.0	1.0
	가족노동	1.905E-02	.1373	0.0	1.0
	직업적 지위(단순노무직 기준)				
	생산직	.2190	.4156	0.0	1.0
	서비스/판매직	.1524	.3611	0.0	1.0
	사무직/중간관리직	.3905	.4902	0.0	1.0
	기술전문직	.1333	.3416	0.0	1.0
	고위관리직	3.81E-02	.1923	0.0	1.0
실직 특성	실직기간(개월)	12.38	10.29	1.0	48.0
	실업급여액(만원)	15.69	19.55	0.0	59.0
	이전 실직경험	.4602	.5006	0.0	1.0

실직 이전 취업경력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고용형태 구성은 정규직 76.2%, 임시직 19.0%, 일용직 2.9% 등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실직 이전에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실직 이전의 직업적 지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무직 및 중간관리직이 39.0%, 생산직 21.9%, 서비스 및 판매직 15.2%, 단순노무직 등 6.8%, 고위관리직 3.8%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실직 이전 직업적 지위 분포는 대체로 다양한 편이지만, 주로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실직양상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평균 실직기간은 12.38개월로, 평균 1년 정도의 장기간 실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직기간 동안 2주마다 1회씩 수급한 실업급여 액수는 평균 15.6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46.02%는 이전에도 실직을 경험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다음으로 이들 조사 대상자들의 구직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실직기간 동안 평균 7.16건 정도 구직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지원에 대해 고용의뢰를 받은 경우는 평균 1건 정도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구직지원 활동에 비해 고용의뢰 지원 건수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마스크 및 PC 등의 정보매체(58.4%), 혹은 친척 및 친구 등의 비공식적 연결망(29.5%)을 주된 구직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민간 및 공공 직업안정기관에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시점에서의 고용상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39.8%는 재취업하여 실직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60.2%는 구직등록 이후 6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실직기간 구직활동의 양상

이상에서는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재취업 실태와 일반적 특성들을 개괄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재취업 실직자들과 여전히 실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실직자들간 실직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양상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재취업에의 구직활동의 영향 분석에 앞서, <표 3>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직자(실직지속자)와 재취업자의 실직기간 구직활동 양상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구직노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자의 구직지원 건수는 평균 7.71건으로 실직지속자의 구직지원 건수 6.8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검증되어, 구직노력 총량에서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제의 건수를 통해 효과적인 구직활동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취업자에게 실직기간 의뢰된 고용제의 건수는 평균 1.53건으로, 0.52건에 불과한 실직지속자들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와 같은 고용제의 건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 실직자와 재취업자의 구직활동 총량에서의 차이는 미미하나 질적 차이는 두드러짐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실직기간 동안 구직방법들의 활용 양상을 비교하여 보면, 먼저 주된 구직방법의 선택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직지속자와 재취업자 모두 공히 주된 구직방법으로 매스컴 및 PC, 혹은 친척 및 친구 등의 비공식 연결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민간 및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된 구직방법의 선택에서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구직방법들의 활용수준 측면에서의 재취업자와 실직지속자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재취업자의 구직방법 활용도 점수(9.26점)가 실직지속자(8.8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취업자들이 실직기간 동안 구직방법들의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는 아닌 것으로 검증되어, 구직방법 활용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직기간 구직태도에의 차이를 유보임금 수준을 통해 검토하여 보면, 실직지속자들의 평균 유보임금 수준은 112.13만 원으로, 재취업자의 91.33만 원에 비해 20만 원 정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이와 같은 유보임금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어, 재취업에 기대하는 임금수준이 재취업자에 비해 실직지속자의 경우가 현격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곧 경기불황과 고실업의 거시경제적 상황을 감안치 못한 구직태도가 실직지속자들에게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표 3〉 실직자와 재취업자의 구직활동 양상의 차이

구 분	재취업 상태	평 균	표준편차	T 값
구직지원 건수	실직자	6.8088	10.9357	-0.444
	재취업자	7.7111	9.9900	
고용제의 건수	실직자	0.5294	1.1778	-3.100*
	재취업자	1.5333	1.9494	
주 구직방법 (1) (친척 및 친구)	실직자	0.2794	0.4520	-0.108
	재취업자	0.2889	0.4584	
주 구직방법 (2) (매스컴 및 PC)	실직자	0.5735	0.4982	-0.277
	재취업자	0.6000	0.4954	
주 구직방법 (3) (민간직업안정기관)	실직자	1.47E-02	0.1213	0.812
	재취업자	0.0000	0.0000	
주 구직방법 (4) (공공직업안정기관)	실직자	8.82E-02	0.2857	-0.012
	재취업자	8.88-E02	0.2878	
주 구직방법 (5) (직접 접촉)	실직자	2.94E-02	0.1702	0.231
	재취업자	2.22E-02	0.1491	
주 구직방법 (6) (기 타)	실직자	1.47E-02	0.1213	0.812
	재취업자	0.0000	0.0000	
구직방법들의 활용도	실직자	8.8955	1.5967	-1.250
	재취업자	9.2667	1.4523	
유보임금	실직자	112.13	38.9059	2.887*
	재취업자	91.33	35.2169	

p<0.1, * p<0.05, ** p<0.01

정리하면,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에서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취업 경력, 실업경험 등의 측면에서 차이뿐 아니라, 실직기간 동안에 전개된 구직활동 양상에서도 실직(지속)자와 재취업자간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분석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실직자들이 보유한 관련 특성'뿐 아니라 '실직기간에의 구직활동이라는 실직자들의 행태' 역시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미를 지닌 결과라 평가된다.

그러나 실직기간에의 구직활동 양상이 실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등의 관련 제반 특성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구직활동의 집단간 차이만을 분

석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실직자 재취업에의 구직활동의 영향

조사대상 실직자들을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실직(지속)자 집단과 재취업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직기간 동안에의 구직활동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구직활동과 재취업간 상관관계를 추정함에 유용하긴 하지만, 관련 변수들이 통제되지 못함으로 인해 인과관계 측면에서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없는 점에서 한계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는 Logistic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직기간에의 구직활동이 실직자 재취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델에서는 조사대상 실직자들의 현 시점에서의 고용상태(실직/재취업)를 종속 변수로, 실직기간에의 구직활동 경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실직자의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실직 이전의 노동시장 경력, 실직 특성 등의 관련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실직자 재취업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 1>은 독립변수인 구직활동 변수들만을 투입하여 구직활동이 실직자 재취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모델로, 분석결과에서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실직기간 구직활동 양상을 토대로 재취업 결정을 분석하려는 접근방법이 경험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분석결과에서는 <모델 1>의 모델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어(Model Chi-Square 20.081, $P < .05$), 실직기간의 구직활동에 토대한 실직자의 실직지속과 재취업 결정에 대한 설명, 곧 직업탐색이론에 입각한 접근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모델 적합성 검증결과는 실직자 특성 모델(<모델 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비되어 더욱 주목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수와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상의 분석결과에만 의거하여 실직자 특성 모델에서의 설명이 적합치 못한 것으로 결론짓거나 혹은 실직자 특성모델에 입각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들을 부정할 수는 없

〈표 4〉 실직자 재취업에의 실직기간 구직활동의 영향 (logistic regression)

	모델 1 B(S. E.)	모델 2 B(S. E.)	모델 3 B(S. E.)
구직지원 건수	-.0207 (.0282)		-.0340 (.0344)
구직제안 건수	.4949* (.2128)		.4348# (.2498)
주 구직방법 (2)	-.0186 (.5095)		-.2628 (.8569)
주 구직방법 (3)	-6.4827 (36.6598)		-5.0325 (60.4497)
주 구직방법 (4)	-.0752 (.8020)		-.5270 (1.2373)
주 구직방법 (5)	.0033 (1.3535)		-7.0634 (42.5207)
주 구직방법 (6)	-6.1772 (36.6602)		-9.6879 (60.4474)
구직방법 활용도	.1604 (.1402)		.4335* (.2134)
구직태도(유보임금)	-.0121# (.0062)		-.0295* (.0122)
성 별		-.3608 (.6628)	.5766 (.9570)
연 령		-.0113 (.0342)	-.0153 (.0453)
학 령		.0298 (.1368)	.1954 (.1913)
기술 자격증		1.1363# (.5917)	1.9000* (.7534)
혼인상태		-.6752 (.6675)	.4223 (.8545)
실직기간 가구소득		-.0053 (.0032)	-.0028 (.0037)
고용형태 1)			
임시직		-.0999 (.7404)	-.8723 (.9168)
일용직		.5969 (1.6380)	.0705 (1.6628)
가족노동 형태		-7.3068 (24.8428)	-7.2428 (60.4534)
직업 2)			
생산직)		-2.1133 (1.3140)	-2.2222 (1.4184)
서비스/판매직		-1.9964 (1.3482)	-1.3874 (1.4957)
사무직/관리직		-2.3456 (1.3069)	-1.8187 (1.4386)
전문기술직		-3.2302* (.0240)	-3.1314# (1.6082)
고위 관리직		-2.3141 (1.8962)	-1.4481 (2.1743)
실직기간		-.0367 (.0285)	-.0393 (.0354)
실업급여수준		.0203 (.0170)	.0525# (.0233)
실직경험		-.0179 (.5364)	-.0667 (.6166)
상수항	-.8854 (1.4463)	-2.5805 (2.4250)	-3.2066 (3.4102)
-2 Log Likelihood	130.834	100.613	81.894
Model Chi-Square	20.081*	22.089 (N. S.)	39.949*

p<0.1, * p<0.05, ** p<0.01

1) 고용형태의 기준 더미변수는 상용직임. 2) 직업의 기준 더미변수는 단순노무직임.

지만, 이상에서의 구직활동 모델의 적합성 검증 결과는 최소한 “구직활동 측면을 간과한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지금까지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모델 1>의 분석결과에서 구직활동 요소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구직지원 건수와 주 구직방법, 구직방법 활용도는 재취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구직제안 건수와 유보임금은 재취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구직노력의 전개와 현실 적합한 구직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곧 “실직자들이 가능한 구직방법들을 선택·활용하여 구직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선별하는 현실 적합한 신중한 구직태도를 지니도록 하면서 효과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직탈출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기하여 준다.

따라서,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 요소들의 이와 같은 영향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의 고용안정기관의 구직지도(*career guidance*) 방향은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직자들의 재취업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에 부수된 구직활동 점점에 있어, 구직활동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 보다 초점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구직상담 내용도 ‘구직방법들의 소개’ 혹은 ‘구직지원 노력의 교양’보다는, ‘현실 적합한 구직태도의 배양’ 및 ‘효과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조언’들이 더욱 실직자들의 재취업 제고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직자들의 관련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재취업 결정에의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고연령, 저학력의 실직자일수록 재취업률이 낮은 반면, 기술 자격을 보유한 경우일수록 재취업률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 및 실직자 재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과도 일치되는 바이다. 또한, 분석결과에서의 가구소득 및 직업적 지위의 부적(-)인 영향은, “경제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기대임금수준이 높고, 직업선택이 더욱 까다로워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도 일치되는 바이다. 또한 “실직기간이 높을수록 재취업률이 낮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와도 일치되는 바이다.

물론, 실직자들의 관련 특성들의 영향에 관한 <모델 2>의 분석결과에서 실제적으

로 재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술자격증 보유'와 '직업적 지위' 변수에 국한되지만, 이상에서 검토된 실직자 관련 특성 변수들의 영향은, 조사 대상자들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데이터가 실직/재취업 결정에의 일반적 양상을 담지하고 있음을 표명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모델 3>은 실직자들의 개별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델로, 분석결과에서는 <모델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직활동 요소들의 주요한 영향들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즉, 분석결과에서는 효과적인 구직노력과 현실 적합한 구직태도는 관련 변수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구직노력의 절대량과 주된 구직방법의 선택은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 적합한 효과적인 구직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모델 1>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모델 3>에서 구직방법 활용도가 재취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데, 이는 구직방법들의 활용도가 실직자들의 관련 특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서, 그리고 관련 변수들의 통제 여부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 즉 <모델 1>에서와는 달리 <모델 3>에서 구직방법 활용도의 유의미한 영향이 추가된 사실은, 관련 변수들의 통제시 구직활동의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과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의 직업탐색 이론 및 구직활동 모델의 적합성을 시사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모델 3>에서의 실직자 특성 변수들의 영향은 <모델 2>의 분석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취업에의 기술자격증(+)과 직업적 지위(-)의 유의미한 영향은 <모델 3>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령, 학력, 가구소득, 실직기간, 실직경험 등의 변수들의 영향 역시 <모델 3>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및 혼인상태의 영향은 <모델 2>에서와는 상이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한편으로 조사 데이터 수의 미흡(N=113)에서 변수들의 영향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직활동 요소들의 분석모델 투입시 실직자 특성 변수들의 영향이 상이하여 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

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이와 같은 양상은 “구직활동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에서의 재취업 결정에의 실직자 특성요인들의 영향들이 확증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시사하여 준다. 특히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에서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상충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⁴⁾은 이와 같은 맥락, 즉 구직활동 요소들이 통제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곧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의 기존 연구의 접근이 온전치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반증하여 주는 바라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실직기간에 전개된 구직활동 양상이 실직자들의 보유 특성과 더불어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 바로, 이는 곧 “구직활동에 토대한 분석이 실직자 재취업 결정의 역동적 측면을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함에 있어 유용한 접근방법임”을 시사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아울러, 실직기간 전개된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상의 분석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의 모색 혹은 관련 실업대책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취업에 긍정적인 구직활동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제기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실직과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의 주요한 영향은 “실직자들의 행태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 변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한국의 노동시장은 아직까지는 경직되고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라기보다는 유동성을 내재한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함축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4)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직자 재취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연구로는 김종주(1999), 유태균(1999), 강철희·김교성(1999), 진재문(2000) 등으로,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상정한 변수들의 영향은 개별 연구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재취업 결정에의 연령의 영향은 유태균의 분석결과에서는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재문 및 강철희 외의 분석결과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편 김종주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여타 변수들(혼인상태, 성별, 학력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합치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양상은 개별 연구들마다의 조사 데이터 및 분석모델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상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구직활동의 영향이 이들 분석들에서는 통제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양상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최근의 실업률 감소 추세로 한국사회에서 IMF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실업률 완화 추세가 구조적인 양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양상일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에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실업대책 모색에의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실직자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재취업 결정에의 기존 연구들의 접근과는 달리, 직업탐색이론에 토대하여 실직기간 구직활동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 양상을 분석하고, 실업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들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기간 구직활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직기간 실직자들의 구직지원 건수(평균 7건)에 비해 고용제의 건수(평균 1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은 주로 매스컴에서의 광고와 PC, 비공식적인 연줄망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실직자와 재취업자간 구직활동 양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구직지원 건수, 구직방법의 활용 양상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고용제의 건수와 유보임금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하게 실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와 재취업자간에 구직활동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 특히 효과적인 구직활동 노력 정도와 구직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실직자의 재취업 결정에 구직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Logistic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여 본 결과에서는, 구직활동 모델의 모델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이와 더불어 구직제안 건수, 구직방법의 활용도, 구직태도(유보임금) 등의 구직활동 요소들은 실직자들의 관련 특성들의 영향이 통제된 상황하에서도 재취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에 실직기간 동안에의 구직활동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함의들을 제기하여 준다.

먼저, 실직자 재취업 결정에의 구직활동 요소들의 유의미한 영향은 구직활동에 토대한 실직 및 재취업 결정 분석에의 유용성, 즉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탐색이론 접근의 유용성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자,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온전한 규명을 위해서는 실직자들의 특성뿐 아니라 실직기간 동안에의 구직활동 행태에 대한 측면이 포괄되어 분석되어야 할 것임을 이론적 함의로 제기하여 준다.

다음으로, 구직활동 전개 양상에 따라 실직자들의 재취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효과적인 실업대책의 모색, 혹은 기존 실업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직활동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정책적 함의로 제기하여 준다. 즉,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제고와 실업을 해소를 위해서는,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안정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효과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태도가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이 추후에는 보다 실질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구직상담 역시 효과적인 구직활동에의 지도 및 현실 적합한 구직태도 배양에 보다 많은 초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들이 조속히 취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여타 실업대책들의 운영에서도 수급자 선정과정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구직활동 요소들의 영향이 적극 감안되어야 실업대책들의 효과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음 역시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들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자료에서의 조사대상자 수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재취업 결정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일반화함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구직활동의 영향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을 위해 추후 연구들에서는 모집단에 근사한 대표성이 높은 조사대상 표본 — 전국적 차원, 또한 공공직업안정기관에의 미등록 실직자들까지 포괄된 표본 — 에 입각한 분석이 요망된다. 또한, 재취업에 대한 구직활동의 영향이 장단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역시 후속연구에 남겨진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실직자들의 재취업 결정에 구직활동의 주요한 영향이 제

기하는 정책적 함의는 직업탐색이론의 이론적 전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 한다. 즉,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에 입각한 실업대책의 모색과 운영은 job-matching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실업대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함에 일조하는 의의를 지닐 뿐, 그것도 빈 일 자리의 적절한 공급이 전제된 상황하에서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함의가 물론 과소평가 되어서도 곤란하지만 또한 과대평가 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실업대책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은 개별 대책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후속연구들의 또 하나의 과제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강철희·김교성. 1999.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9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종주. 1999.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균. 1999. "IMF 이후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9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진재문. 2000. "구직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구직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5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방하남 외. 2000.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Alison, E. B. et al. 1994. "Job Search Activities: An Examination of Changes over Time." *Personnel Psychology*. vol. 47.
- Balch, B. W. and Fayissa, B. 1990. "An Emprical Analysis of Job Search Duration Utilising Macroeconomic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17. no. 4.
- Barnes, W. F. 1975. "Job Search Models,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the

- Asking Wage: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0.
- Blau, D. M. and Robins, P. K. 1990.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3.
- Bortonick, S. M. and Ports, M. H. 1992. "Job Search Methods and Results: Tracking the Unemployed, 1991." *Monthly Labor Review*. December.
- Caplan, R. D., Vinokur, A. D., Price, R. H. and van Ryn, M. 1989. "Job Seeking,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in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4.
- Dolton, P. and O'Neil, D. 1995. "The Impact of Restart on Reservation Wages and Long-term Unemploy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7. no. 4.
- Feather, N. T. and O'Brien, G. W. 1987. "Looking for Employment: An Expectancy-Valence Analysis of Job-Seeking Behavior among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9.
- Fitzgerald, T. J. 1998. "An Introduction to the Search Theory of Unemployment." *Economic Review* (Cleveland). vol. 34. Issues 3.
- Gorter, C. and Guyonne R. J. Kalb. 1995. "Estimating the Effect of Counseling and Monitoring the Unemployed using a Job Search Mode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1. no. 3.
- Gorter, D. and Gorter, C. 1993. "The Relations between Unemployment Benefits, the Reservation Wage and Search Duratio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5. no. 2.
- Gowan, M. A. and Gatewood, R. D. 1992. "A Casual Model of the Activity Level of Individuals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 vol. 52.
- Granovetter, M. S.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gg, P. and Wadsworth, J. 1996. "How Effective are State Employment Agencies? Job Center Use and Job Matching in Britai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8. no. 3.
- Holzer, H. J. 1987. "Job Search by Employed and Unemployed Yout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0. no. 4.
- Holzer, H. J. 1988. "Search Method Use by Unemployed You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6.

- Jones, R. G. Stephen.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Spells and Reservation Wages as a Test of Search The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3. no. 4.
- Jones, R. G. Stephen. 1989a. "Job Search Methods, Intensity and Effect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1. no. 3.
- Jones, R. G. Stephen. 1989b. "Reservation Wages and the Cost of Unemployment." *Economica*. vol. 56. no. 2.
- Kanfer, R. and Hulin, C. L. 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vol. 38.
- Keely, M. C. and Robins, P. K. 1985. "Government Programs, Job Search Requirements, and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 no. 3.
- Lancaster, T. 1985. "Simultaneous Equations Models in Applied Search Theory." *Journal of Econometrics*. vol. 27.
- Rosenfeld, C. 1975. "Job Seeking Methods used by American Workers." *Monthly Labor Review*. August.
- Rowley, K. M. and Feather, N. T. 1987. "The Impact of Unemployment in relation to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0.
- Schmit, M. J., Amel, E. L. and Ryan, A. M. 1993. "Self-reported Assertive Job-seeking Behaviors of minimally Educated Job Hunters." *Personnel Psychology*. vol. 46.
- Taris, T. W., Jose A. M. Heesink, and Feij, J. A. 1996. "The Evaluation of Unemployment and Job-Searching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29. no. 3.
- Wanberg, C. R., Watt, J. D. and Rumsey, D. J. 1996. "Individual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1. no. 1.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on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in Korea

Lee, Sang-Rok

(Kunsa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lthough economic crisis is allaying in Korea, the more effective unemployment policies are required in this present. So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relevant factors, especially job search behaviors of the unempyoed on reemployment and look for implications to the improvement of unemployment polici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job search behavior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job search activity and job search attitud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unemployed and the re-employed. Second, we find that the variables of job search behaviors—the effectiveness of job search activity (number of job offers), job search attitude (reservation wage), positive use of job search methods—significantly affect the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 based on search theory may be useful in finding out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Second,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on the reemployment and their implications should be actively accepted to policy mak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unemployment policies. It meams that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in making or restructuring unemployment policies and their administrations.